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심판청구 선고, 기자회견(안)

☐ 행사취지

-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만 6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지 5년 반만에 선고 예고.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심판 청구 관련 입주기업들의 대응입장 표명

☐ 일 시 : '22.1.27(목), 14:00 이후

※ 현재의 판결 이후, 판결결과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개성공단기업 협회 임원진들이 기자회견

☐ 장 소 : 헌법재판소 앞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 참가인원 : 개성공단 기업협회 임원 20여명

☐ 세부일정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14:00~	헌법소원 심판청구 선고 대기	헌법재판소 앞.
	선고 결과 설명	법률대리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기업입장 발표	이재철 협회장
	사진촬영 및 구호제창 / 해산	

※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입 장 문

현재는 2022년 1월 27일 개성공단 불법폐쇄에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자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그 존재의미를 상실하였습니다.

2016년 2월 10일, 당일 박근혜 정부는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어떠한 사전 준비나 예고도 없이 법에 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단행하였고, 그 피해는 지금까지도 기업들에게 이어져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6년 5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2016헌마 364)을 청구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선고가 오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마지막 보루라 여기고 5년이 넘는 기다림이 있었는데, 이번 기각 결정은 개성공단, 나아가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이 결정으로 개성공단 태동 이전으로 후퇴하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법적인 조치에 경종을 울리고 개성공단 재개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 부분에서 헌법재판소가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고려한 게 아닌지 실망과 함께 아쉬움이 큼니다.

오늘 결정 내용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라는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를 인정했지만, 그 결정과정에서 일부 법적 절차를 어겼고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확인한 만큼, 추후 이를 바탕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기업들의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생존의 갈림길에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2022.1.27
개성공단기업협회